

大學入試 改革 : 그 未來的 展望

李 中
(高麗大 教育學科)

I. 前提的 考察

大學制度는 스스로를 각 時代의 社會·文化的 環境에 적응시키면서 동시에 그 전통적 類型과 同一性을 근본적으로 상실함이 없이 지켜 온 社會制度의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自己同一性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낡은 스스로의 蘇生을 위한 活力素를 끊임없이 흡수해 나가는 ‘保守·持續’과 ‘適應·革新’의 自己調整作用은 대학의 歷史的 發展過程에서 언제나 순조롭게 반복되어 온 것은 아니다.

人類의 知的 유산의 계승과 時代的 변화로부터의 相對的 隔離을 특징으로 하는 대학이 변모하는 歷史的 狀況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環境에의 적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既存 大學의 目的·機能·構造·教育의 內容과 方法 및 施設 가운데에서 시대의 요구에 부적합한 요소가 蓄積되어 간다. 그리하여 不適應이 극한에 달하고 모든 矛盾과 機能障礙가 顯在化할 때 대학을 지원 하는 국가·사회적 集團으로부터, 때로는 대학의 內部로부터 대학의 自己革新을 촉구하는 壓力이 발생하는 것이다. 大學入試의 改革은 이러한 脈絡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現行 대학 入試제도의 功격을 보면, 先進各國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참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꼭 같은 것은 아니고 특히 그 運用方式에 있어서 상당한 差異가 있는 것이다. 선진 각국의 制度와 運用方法에도 問題點이 있고, 그들 나름의 改善을 위한 研究·努力이 계속되고 있음을 본다. 우리의 制度와 運用方法에도 問題點이 있고 우리도 改善을 위하여 노력해 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지만 先進各國의 경우, 問題點의 파악과 改善方案의 수립을 위하여 長期間의 研究·檢討의 過程을 거친다. 우리의 경우, 改革이 빈번하고, 빠르고 거칠다는 것이 衆論이다.

우리의 過去 또는 現行 大學入試制度의 功격을 보면 大學別考査, 國家學力考査, 內申制, 實技考査, 無試驗 추천제, 서류전형 등 여러 가지이다. 이러한 制度들은 선진 각국에서도 원용하는 방법들이다. 筆者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앞으로 必要에 따라, 모두 多樣하게 또 合理的으로 援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어떠한 획일적인 入試制度나 方法論이 모든 地域의 모든 大學 또는 學科에 柔軟性 없이 適用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학 入試의 문제는 高等教育 改革의 一部分으로 파악되어야 하겠고, 平生教育理念의 具顯이 국가 시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未來社會에 있어서의 大學入試가 오늘날의 그것과 같은 것일 수는 없다. 대학 入試는 學習社會(Learning

Society) 形成·發展을 위하여 중요한 教育的 契機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대학 입시 개혁의 未來의 展望에 있어서의 原則的 前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다.

첫째, 選拔方法의 多樣化·合理化

둘째, 각 大學·學問系列·學科의 自律機能 確認

셋째, 平生教育制度와의 連繫

네째, 高等教育 人口政策의 變化

다섯째, 行政體制의 改革

먼저 대학 입시의 本質的 機能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위의 原則적 前提들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大學入試의 基本機能

먼저 大學入試制度와 그 運用이 가지는 몇 가지 教育的 및 社會的 意義를 한번 反省해 보자.

첫째, 入試는 進學者를 選分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選分이 대학의 教育目的이나 教育內容에 비추어 본 지원자의 資質의 適格 여부에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은 多言이 필요 없다. 그런데 教育的 水準이 어떠한 個人의 社會階層上昇을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進學에 관련된 選分의 過程은 社會的인 심각한 論難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先行된 全教育的 과정과 경험에 대한 하나의 評價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학 입학 시험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中等教育에 있어서의 成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入試制度는 下級學校의 全教育課程의 運用과 교육의 質을 規制하는 反射機能을 발휘한다. 따라서 原理적으로 大學入試는 下級學校에 있어서의 全教育經驗을 검토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方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方案이 敎科目에 대한 筆記試驗이 될 수도 있으며, 實技試驗 혹은 口述試驗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修學者의 '全人的인 健全한 發展'이 核心的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修學者의 지식이나 실기능력뿐만 아

니라, 그의 健康, 질서의식, 협동심, 희생정신, 人間關係, 指導性 등의 人性評價도 辨別할 수 있음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째로, 大學入試는 教育에 있어서의 民主的 機會均等の 原則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入試는 宗教的, 經濟的, 社會的 身分, 居住地域, 性別 등에 의한 不公正의 可能性을 除去하는 하나의 제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觀點에서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大學入試制度와 運用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暗記式 學習과 斷片의 理解에 치중된 教育은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意思表現能力의 培양을 어렵게 하고 있고, 應用力이나 創意性 함양, 自然의 理解, 健康의 增進 등은 學校教育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實情이며, 실제적 生活經驗을 통하여 協同心을 기르고, 情緒의 醇化를 기하며, 民主市民의 資質을 함양하는 일들은, 많은 경우에 口頭禪의 수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우리 教育의 現實的 盲點들이 모두 大學入試制度와 그 運用上의 問題點들과 無關한 것이 아님에 대하여 우리의 깊은 自省이 필요한 것이다.

III. 選拔方法의 多樣化·合理化

未來社會, 예컨대 21世紀 中半 이후에 있어서의 韓國教育은 오늘날보다 훨씬 大衆化·高度化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러한 추세에 相應하여 大學의 選拔方法은 당연히 多樣化·合理化의 方向으로 改革될 수밖에 없다.

우선 全國學力考查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전국 학력고사는 원칙적으로 中等教育修了 資格考查의 성격을 갖게 하고, 시험범위는 實技能力검사를 제외한 中等敎科課程의 全部로 하되, 共通科目과 選擇科目으로 區分하며, 出題方法은 主觀式과 客觀式을 併用한다. 학력고사의 결과는 각 敎科目別로 제시됨이 타당하다. 總點數 하나를 기준으로 入學志願을 하게 되는 現行方式은 教育的으로 매우 격정스러운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科目別 評價에 있어서 教育적 필요에

따라 細分評價의 방법이 유익하다. 예컨대 학생들의 국어 작문능력, 외국어 회화능력의 향상, 혹은 건전한 自然觀, 審美觀의 형성을 겨냥한 評價方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科目別 總評價는 1點差異 방식을 지양하고 적어도 5點差 이상의 等級化 방식으로 表現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入學査定 때에 등급화된 評價를 다시 점수화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배려점은 全國學力考查의 教育的 意義에 관한 것이다.

試驗管理는, 예컨대 大學教育區(複數의 一般行政區域을 통괄하는 高等教育 행정구)의 선치를 가상한다면, 중앙정부, 大學教育廳(대학교육구에 설치되는 행정기관)과 지방 教育행정당국(시·도 교육위원회)이 협동으로 구성하는 試驗委員會가 담당하며, 試驗日數는 연속된 2日以上 또는 分散된 多數日로 한다. 1日·1回의 考查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 不合理性을 제거하는 것이다.

受驗者는 각 大學(또는 學科)의 入學査定方法 혹은 각 就業機關의 취업조건에 비추어 各自의 選擇 受驗科目과 日時를 정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된다. 共通科目은 모든 志願者가 受驗하게 될 것이고, 그 科目數는 3~4과목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選擇 과목이 考查實施에 있어서는, 共通科目 이외의 모든 教科目別로 出題되고, 그 중에서 각 志願者는 2~3과목에 應試하도록 함이 적당하다. 결국 각 受驗者는 5~7 教科目에 合格함으로써 中等教育修了의 資格을 저마다의 考查成績等級에 따라 公認받게 되는 셈이 된다.

大學入試制度의 多樣化·合理化를 위해서는 全國學力考查 외에 地域別 學力考查, 內申制, 實技시험, 口述시험, 추천제, 서류전형제 등의 諸方案이 종합적으로 援用될 수 있는 길이 開放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大學教育區內 또는 大學教育區間 大學聯合會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合理的 기준과 절차에 의한 公認의 地域學力考查의 실시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大學別 入學査定에 있어서 必要에 따라 또는 特定한 狀況하에서 口述試驗이 筆記試驗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추천제나 서류전형이 언제나 不公正과 不條理와 직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教育的이고 社會的인 意味를 가질 수도 있다.

전국적 또는 지역별 學力考查의 성격을 公認의 中等教育修了資格 관정 절차로 규정하고 各 大學別 自律選拔機能을 인정하는 것을 前提로 한다면, 先試驗·後志願 방식이 좋다. 先試驗이나 後志願이나 競合的 상황에서 不確實性和 不安感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後志願이 大學進學 希望者들에게 더욱 여유 있는 選擇의 機會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大學·學科別 選拔機能의 確認

中等教育修了의 資格이 公認된 者에게 大學의 門戶는 公正하게 열려 있어야 함과 동시에 各 大學 各 學科는 저마다의 建學目的과 教育內容에 적용할 수 있는 資質을 갖춘 適格者를 選拔하는 自律的 機能을 確保해야 한다. 오늘날의 大學의 無氣力症狀는 大學入試 過程에서의 自律的 選拔機能의 상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86학년도 新入生부터는 各 大學別로 실시될 '論述考查'를 치루게 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미소한 보완책에 불과한 것이다.

最近의 대학 입시제도의 두드러진 問題點의 하나는 學力考查成績과 內申成績을 합산한 總點 하나를 기준으로 入學志願을 하게 되는 데에 있다. 이른바 '눈치作戰'이 盛行하고 非教育的 상황에 대한 비판적 世論이 드세다.

학력고사의 總點이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과 質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行 選拔制度에 있어서는 이 事實에 대한 배려가 없다. 學力考查成績과 內申成績의 합산 總點이 大學에서의 일반적 修學能力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特定 系列·學科의 수학에 요청되는 능력이나 適性을 판별하는 유일한 基準으로 삼기는 어렵다. 補完策이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全國的 學力考查를 共通科目과 選擇科目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경우 各 대학의 系列·學科는 特定 共通科目 또는 選擇科目에 있어서의 特定等級 이상의 합격율 選拔要件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도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각 系列 또는 學科別 筆記試驗(論述試驗) 또는 口述試驗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에 全國學力考查의 평가가 등급화되지 못하고 點數化되어 있는 段階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대학의 각 系列·學科에서는 학력고사의 특정 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加重評價를 부여하는 방법을 원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現行의 人文·自然系列別 지원자에 대한 加減點制는 물론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각 大學別 및 각 系列·學科別로 저마다의 응분의 自律的 選拔機能을 確認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確認은 입학 후 大學生들의 修學指導와 生活指導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全國的 또는 地域別 모든 대학이 같은 日자에 같은 方法으로 入試節次를 밟아야 할 까닭이 없으며, 같은 大學 안에서, 必要하다면 系列·學科別로 시험일자와 사정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말이 放任主義의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전국적·지역적 또는 대학별로 대학 입시에 관한 基本原則·指針이 있을 수 있고, 각 系列·學科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저마다의 特性 伸張을 위한 自律的 機能의 발휘를 確認하면 되기 때문이다. 大學은 本來的 使命의 완수를 위하여 변화하는 社會·文化的 諸條件에 상응하는 스스로의 改革作業을 적극적으로 推進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어진다.

V. 平生教育體制와의 連繫

장차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은 平生教育體制와의 더욱 긴밀한 連繫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흔히 大學은 知性의 象牙塔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이 말이 대학은 俗世에서 격리된 社會의 存在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急變하는 社會·文化的 狀況에 알맞는 高等教育기관의 變貌는 필연적인 것이고 大學入試制度와 그 運用方式도 바뀌게 된다.

產·學·軍의 協同·連繫體制가 제대로 確立되었을 段階를 想定한다면, 學力考查를 主軸으

로 하고 있는 大學入試制度는 큰 轉換을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다. 大學의 類型 자체의 변모와 아울러 入試에 관련된 여러 가지 問題考察의 視座가 바뀔 수도 있다. 예컨대 4년제 대학뿐이 아니라 1년제·2년제의 수많은 새로운 類型의 短期大學의 설치·운영이 個人的 및 社會的 要請으로 정당하게 提起될 수도 있고, 入學資格要件에 관한 多樣性的 容認은 불가피하게 된다.

고등교육 체제가 民主的 複線化의 과정을 밟으면서 변모해 갈 때, 대학에서 새로이 받아들여야 할 入學志願者들의 選拔方式이 얼마나 複合的이며 多樣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유무없이 헤아려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선 現行의 研究生制度·정강생 제도·委託學生制度和 編入學試驗制度 등의 變容·擴大 실지를 예상할 수 있다.

간·夜間教育에 대한 差別的 認識이 是正되어야 하며, 放送·通信大學, 公開大學 및 새로운 短期 專門大學들과 4년제 正規大學들과의 合理的인 連繫體制가 整備됨에 따라 既存의 入試方法의 개혁은 오히려 當爲의인 과제로 긍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先進國의 實例에서, 상당 부분의 大學院教育이 夜間에 이루어지고 있고, 職場生活人들의 再教育을 위한 機會가 점차로 확충되어 가고 있음을 본다. 學力考查成績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합리적 準據에 따라 無試驗(서류전형)入學 또는 編入學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大學入試制度가 발전해 나갈 것으로 筆者는 展望하고 있다.

軍服務·職場生活 등의 經歷과 能力水準 등이 대학 입학과 편입학에 있어서 學力水準 못지 않게 존중되고, 產業體나 國·公·私立의 社會기관·단체의 요청에 따른 要員再教育·研修를 위하여 大學의 門戶가 폐쇄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요컨대 大學은 사회발전을 위한 高級學習中心處(Advanced Learning Center)가 되어야 한다. 드디어 대학 學部의 교육은 大衆化·普遍化되고 高級 學問研究의 主機能은 大學院과 각 대학의 研究所가 담당하게 되는 모습이 부각될 것이다.

Ⅵ. 高等教育人口 政策의 變化

大學入試는 質과 量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質·量은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論한다면 거의 무의미하게 되는 일이 많다. 불가분의 相關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急加速의인 현대 과학·기술문화의 발달에 따른 産業構造의 變化와 社會·經濟體制 運用方法의 개혁은 당연하게도 오늘날의 대학교육에 막대한 衝擊을 가하고 있다. 급격한 변혁의 모습은 최근에 있어서의 高等教育人口의 급속한 膨脹現象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 현대의 각 국가사회가 계속적인 高等教育人口의 증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주된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社會·經濟的 要因(Pull 요인)과 個人的 要因(Push 요인)이다.

한 나라의 교육체제 가운데에서 中等教育 이후의 教育機會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고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制度·構造·目的·機能의 유기적 統合으로서의 '高等教育 시스템'을 量的으로는 規模擴大의 방향으로, 제도적으로는 학교 체계의 平準化 경향으로, 구조적으로는 多層化의 방향으로, 目的·機能의 면에서는 多元化·多樣化 경향으로 변모시켜 온 강력한 歷史的 潮流가 우리의 現實 주변에 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보편화의 세계적 추세를 肯定할 때에도, 그 量的 適正規模의 문제는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大學定員政策을 취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平生教育體系의 발전에 따라 대학정원 정책은 많이 변혁될 것으로 展望된다.

가까운 北韓의 구상을 잠깐 살펴보자. 근래 金日成은 온 사회의 革命化·勞動階級化가 이루어진 다음 단계의 '社會主義 教育체제'는 '全社會의 인텔리화'라고 주장한다. 全社會의 인텔리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하며 배우는 高等教育體系'를 확충·발전시킨다는 것이다. 北韓式 교육이념과 정책의 '實證'을 바탕으로 고찰한다면 全社會의 인텔리화란 결국 전 국민의 全生涯의 통제 방식을 강제적으로 더욱 高級化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공산·사회주의적 교육의 미래 전망

이다. 그러나 그들의 구상이 고등교육의 대중화·보편화의 세계적 추세에 鈍感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自由·民主社會의 경우, 이론적으로 高級人力의 需給規模와 職業集團別 教育水準에 관한 適正值를 상정한다면, 그러한 적정선을 넘은 高級人力의 供給은 예컨대 경제발전을 阻害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經費와 人力의 헛된 消耗라고 판단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生動的인 사회·문화적 변화를 經驗하고 있는 社會에 있어서의 大學定員의 適正規模를 분야별로 또 具體的으로 正確하게 規制할 수는 없다. 또 經濟的 生産性(Productivity)에 대한 교육의 寬與度나 혹은 교육이 가져 오는 個人에 대한 經濟的 收益性 등에 관한 測定方法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高級人力 需要·供給의 適正規模 설정에 있어서의 不明瞭性은 불가피한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高級人力의 缺乏現象으로 인하여 받는 損傷은 경제적 需要를 초과하는 고급인력의 過剩供給現象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상보다도 훨씬 클 것이 분명하다. 産業豫備軍의 健在는 국내 産業構造의 변화나 國際的인 經濟動向의 급변 등에 對處할 수 있는 國家政策 수행상의 柔軟性을 確保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條件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大學定員政策을 취해야 할 단계에 있어서는, 고등교육 인구의 地域別 分散策을 추진하고, 系列·學科別 學生人口 分布比는 장기적 社會·經濟發展 計劃에 부합되도록 配應될이 유익하며, 私立教育機關에 대해서는 國·公立보다 더욱 많은 自由裁量權이 인정됨이 바람직하다. 産業·經濟活動 中心의 地方分散과 아울러 教育·文化 中心의 地域分散이 필요하며, 私立 고등교육기관의 건전한 발전은 民主社會에 있어서의 自由文化圈의 健在를 상징하는 意義가 있다.

Ⅶ. 行政體制의 改革

大學入試의 改革은 대학교육, 나아가서는 教育體系 전체에 관련된다. 당연히 각 大學 및 政

